

국민의힘, '2차 탄핵안 표결' 참여 가능성 ↑

야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지난 7일 첫 표결에 3명(안철수·김예지·김상욱)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야당의 탄핵안 재발의와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 여론의 압박 속에 여당이 2차 표결도 '보이콧'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지난 1차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초·재선을 중심으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에 들어가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이후로도 '2차 표결'에는 동참하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의 곤혹스런 분위기는 수도권은 물론, 보수의 텃밭이라는 대구와 부산 등도 마찬가지다.

실제 국민의힘 지역 당사나 국회의원들의 지역 사무실에는 표결 불참의 책임을 묻는 항의 집회 등 시민들의 압박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촛불 민심' 압박 속 2차 표결 보이콧 부담 클 듯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부산 등에서도 압박 거세 안철수·김예지 이어 김상욱도 "탄핵 찬성" 표명

여당의 2차 표결 참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관심은 '탄핵 반대 당론'에서 이탈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에 쏠린다. 법안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된다.

1차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

사회권을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김예지 의원에 이어 여당 내에서 3번째로 공개적인 찬성 입장이 나온 것이다.

2차 표결이 예상되는 14일까지 여당에서 찬성 표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

도 작지 않다.

여당에서 처음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입장을 바꿨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 대신 '즉시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차 표결 때까지 윤 대통령이 하야를 거부할 경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하야가 늦어도 이번 주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며 김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런 의원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

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욱 의원은 "(탄핵 찬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다. 때가 되면 뜻을 같이할 것"이라며 그 숫자에 대해서는 "단언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탄핵 통과에 충분한 숫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의 탄핵 찬성 동참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각 의원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빠르면 이번 탄핵 표결 때는 많은 의원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김진수 기자



'내란 상설특검' 본회의의 통과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野 '내란사태 특별대책위' 출범

尹탄핵 외 다른 길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민석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30여명 규모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물론 시민사회 협력, 경제 상황, 외교까지 살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추미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내가) 법무부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위와 관

련해 징계 명령했던 것처럼 윤 대통령의 숨겨온 기밀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윤석열은 부정선거 선동과 함께 국지전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지속하고 영구집권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제2의 전두환'을 꿈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정보단장인 안구백 의원은 "한 번 총구를 들이던 자는 두 번도 할 수 있고 전횡도 불사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추진단' 단장인 윤호중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아직 군 통

수권자'라는 말이 보도되자마자 외환 시장이 크게 흔들렸다"며 "내수·수출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루 빨리 탄핵을 결정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와 한국 간의 외교 계통 확보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협력단장인 정동영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정리되는 즉시 국회 차원에서 미국에 사절단을 보내 트럼프 인수위원회, 상·하원, 싱크탱크와 언론을 접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주 3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여의도 집회 참석 시민들을 위해 민주당 당사 앞에 쉼터를 설치했으며 국회 앞에서 노숙 시위하는 시민에게 전막을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하야·탄핵은 '즉각'...강제수사 변수도

●尹대통령 직무정지 시나리오

하야 선언 시 국무총리 권한대행...탄핵 가결해도 직무 정지 구속 시 '사고'로 볼지 관건...어떤 경우든 국정 공백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으로 국정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현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가장 명확한 절차는 자진 사퇴와 탄핵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 즉 하야를 결정할 경우 과도기적 국정 운영에 따른 혼란은 즉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면 대통령직은 '궐위' 상태가 된다.

하야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하야를 선언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을 중단하게 할 방법은 탄핵이 유일하다.

야권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탄핵안을 무한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현재까지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

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 이상이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현재의 기각 결정까지 2개월가량 걸렸다.

이러한 현재의 심판 기간을 고려해 인용된다면 차기 대선은 4-5개월 후에 열리게 된다. 물론 현재에서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현재 재판관 6명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의 변론을 열 수 있다"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관 구성 문제

로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경우 국정 공백 상태는 그만큼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탄핵과 하야의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 상황도 과도기적 국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 대통령이 체포 후 구속 상태가 될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봐야 할지를 두고 법학자 간 의견이 분분하다.

/연합뉴스

헌법에 따른 내란죄 처벌 규정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기권력을 빼앗거나 국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 | 2 | 3 |
|------------------------------|--|--|
| 무도미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 부화수행(附和履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검찰 판단

내란의 정점

윤석열 대통령 (12월 9일 출국금지)

김용현 전 국무부 장관

김진 장관 구속영장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규정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장,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의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원칙"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필요성 시사

자료: 법제처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차만손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소통해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22년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933명) 중 횡단중 교통사고 사망자 54.6%(509명) 차지

도로 횡단 의사 표현

'22. 7. 12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려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와 소통하는 문화

차량 양보율(광주·전남) 9% → 차만손 수신포 실천 시 86%

보행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핀다.
- 2 다가오는 차량을 향해 손을 90도로 받는다.
- 3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며 손바닥을 보인다.
- 4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넌다.

운전자 실천방법

- 1 도로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한다.
- 2 보행자가 통행의사를 표시하면 일시정지한다.
- 3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지나간다.

QR 코드 스캔하여 차만손 영상 보기